

---

---

# 한국전쟁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선택

---

---

김보영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머리말

### I. 중국군 포로의 발생과 성격

1. 중국군 포로 규모와 수용
2. 중국군 포로조직

### II. 중국군 포로 심사와 선택

1. 중국군 포로 심사
2. 중국군 포로의 선택과 그 배경

### III.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송환 비율

1. 포로협상 쟁점과 중국군 포로
2. 중립국송환위원회와 포로의 마지막 선택

##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B5 A07044759)

● 투고일: 2016. 8. 5    ● 심사일: 2016. 8. 9.    ● 게재확정일: 2016. 8. 29.

## 요약

한국전쟁 포로협상에서 중국군 포로 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 중국군 포로의 송환거부 비율이 북한군 포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고, 중국은 이것을 문제 삼았다. 포로문제에서 중국이 가졌던 강경한 입장은 포로협상 결렬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전쟁은 일년 이상 더 지속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중국군 포로의 심사와 선택 문제를 심리전 차원에서 접근했다. 유엔군의 포로교육은 중국군 포로의 송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데, 포로교육을 담당할 대만출신 요원들은 적극적으로 대만행을 유도했다.

그러나 포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포로수용소를 장악한 전국민당군 출신의 우익포로지도자들로, 그들은 포로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선택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인 포로의 압도적 다수가 송환을 거부한 이면에는 이러한 폭력적 강압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포로협상에서 이를 문제 삼은 중국측 의도 역시 심리전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무승부의 전쟁에서 포로의 선택은 협상을 통해 보상받았을 양측 의도와 긴밀히 결합되었고, ‘강요된 선택’의 와중에서 포로들은 이념전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군 포로가 걸림돌이 되어 협상이 일 년 이상 지연되고 전쟁 장기화로 이어진 사실은 전쟁과 협상의 주체 및 결정권이 공산측에서는 중국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이는 전후 정전체제의 구조와도 맞물려 있으며,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전쟁과 휴전협상을 주도한 미국과 중국이 가졌던 결정권을 되짚어 볼 수 있다.

주제어 : 중국군 포로, 송환, 포로협상, 심리전, 대만, 이념전

## 머리말

한국전쟁 휴전회담에서 포로문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이자 전쟁 장기화의 주요인이었다. 포로협상에서 양측은 자원송환원칙이라는 유엔군 측 제안을 두고 대립했다. 여기에는 인도주의적 측면, 심리전적 요인, 이념전적 승리 추구 양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했지만, 포로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유로운 선택과 강요 문제였다. 협상은 표면적으로 송환원칙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지만, 이면에서는 포로의 송환비율, 숫자 문제를 두고 대립했다. 유엔군의 수중에 있는 전체 포로 숫자 대비 중국군 포로는 비율로는 12%에 불과했지만, 포로협상에서 그들의 존재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유엔군 포로수용소에서 송환여부를 심사했을 때 중국군 포로의 송환거부 비율이 북한군 포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고, 그것이 포로협상을 난항으로 이끄는 빌미가 되었다.

그간 이루어진 한국전쟁 포로연구는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휴전회담의 주요 쟁점으로서 포로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휴전회담 쟁점과 포로협상이 휴전회담에서 갖는 의미, 협상의 결렬과 지연 요인, 포로 문제의 성격,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책임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sup>1)</sup> 한국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에 주목한 해외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중국군 포로문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하였다.<sup>2)</sup> 로즈마리 뜻은, 미국의 공산군 포로정책이 중국을 의식한 것이었고

1) 민경길, 1997,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군사』 3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2000, 「미국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 양쿠이송(楊奎松), 2001,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I,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김보영, 2008, 『한국전쟁 휴전회담 연구』, 한양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송환을 거부한 중국군 포로의 선택은 전 국민당군 출신 포로지도자들의 폭력과 강요 때문이라고 보았다. 윌리엄 스투크는 중국이 포로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이유를 대만과의 관계에서 찾았다. 중국이 포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곧 대만 국민당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한국인 포로는 양보하더라도 중국군 포로 전원송환이라는 완강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군 포로에 주목한 연구들로,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민간인 억류자, 납북자 문제 등 주로 한국인 포로에 관심을 두었다.<sup>3)</sup>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미귀환 국군포로, 중립국행 포로 연구 등도 한국군 포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조성훈은 미국 군사자료를 활용하여 유엔군의 포로정책 연구를 시작한 이래 민간인억류자 처리, 미귀환 국군포로, 제3국행 포로, 납북자 송환과 포로협상 등 포로관련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sup>4)</sup>

셋째, 포로정책과 교육, 선택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포로 송환원칙과 포로의 선택, 그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미국 자료를 통해 드러났고, 포로수용소 내 갈등과 포로의 수용 상황, 포로수용소 사건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sup>5)</sup>

- 
- 2) Foot, Rosemary. 1990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illiam Stueck 1995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김형인 외 공역, 2000,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 3) 조성훈, 1996, 「한국전쟁중 민간인억류자의 처리에 관한 연구」 『군사』 3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본부, 2002, 『한국전쟁과 반공포로』; 조성훈, 2001, 「미귀환 국군포로 연구」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2001, 「한국전쟁기 제3국행 포로의 정착과정과 그 성격」 『전사』 제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4) 조성훈, 1999 『한국전쟁중 유엔군의 포로정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최근 수정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한편 중국군 포로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화, 여계언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6)</sup> 김화는 중국군 포로의 발생과 처리, 송환 이후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외국군으로서의 중국군 포로가 갖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여계언은 중국군 포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대만의 개입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대만으로 간 중국군 포로들의 증언, 대만정부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들의 선택이 갖는 자발성과 강제성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기존 연구를 통해 중국군 포로의 규모, 성격, 수용실태, 교육과 선택, 대만의 개입과 선택 굴절 등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왜 중국군 포로가 포로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지, 그 이유와 구조에 대한 해명은 미흡한 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포로송환 원칙과 포로의 선택,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힘, 그리고 한국전쟁 포로협상에서 중국군 포로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쟁점이 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중국군 포로의 발생 시점, 규모, 포로의 성분과 포로조직, 포로지도자 등을 통해 중국군 포로수용소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중국군 포로의 문제로, 포로 심사와 그 결과, 중국군 포로의 송환 여부 선택의 배경과 원인 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포로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군 포로 문제의 쟁점과 이유, 의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과 협상의 주체 및 결정권, 전쟁의 성격, 나아가 정전체제의 구조 파악에도 일조할 것이다.

- 
- 5) 김학재, 2009, 「진압과 석방의 정치-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김학재, 2010,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전쟁 속의 또다른 전쟁』, 선인; 유숙현, 2008,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체험과 송환 선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우, 2011,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화, 2000, 「한국전쟁의 중국군 포로에 관한 연구」, 외대국제지역대학원 석사논문; 여계언, 2013, 「6·25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대만 선택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 I. 중국군 포로의 발생과 성격

### 1. 중국군 포로 규모와 수용

중국군 포로는 1950년 12월 1,245명을 시작으로 1951년 6월에 8,525명의 가장 많은 포로가 발생했다. 다음 표는 유엔군사령부 포로정보국에서 작성한 북한군 및 중국군 포로획득 월별 통계이다. 1950년 7월 25일부터 1953년 7월 18일 사이에 유엔군이 포획한 공산군 포로는 총 171,494명에 달했고, 그 가운데 중국군 포로는 총 21,074명이었다.

표에 보이듯이, 중국군 포로는 1950년 12월 1,245명이 발생한 이래 1951년에 대다수의 포로가 발생했다. 그 후에도 전투 상황에 따라 전쟁이 마무리되는 1953년 7월까지 꾸준히 소수의 포로가 추가되었다. 통계를 보면 1천여 명 이상의 대규모 포로는 1951년 4~6월, 그리고 1951년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군 포로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1951년 4~6월 사이였다. 전체 21,074명의 중국군 포로 가운데 무려 15,489명이 이때 대거 포로가 되었다. 그 숫자는 전체 중국군 포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때 포로가 된 중국군은 대부분 중국군 제60군 180사단 소속 장병들이었다. 이 시기는 중국군이 제5차 전역이라고 부르는 때로, 유엔군의 공세에 밀려 중국군의 전 전선이 40km나 후퇴하고 나서야 간신히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중국군의 명백한 패배였고 손실은 심각했다. 특히 전투 2단계에서 2개 군의 병력이 유엔군에 포위당해 전멸할 지경이었다. 당시 중국군 제3병단 180사단은 60군의 서쪽 끝에서 군단의 측면엄호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전역 2단계에서 180사단장 정기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단장과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사들이 포로가 되었다.<sup>7)</sup>

한국전쟁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선택

【표 1】 공산군 월별 포로획득 통계: 1950. 7. 25~1953. 7. 28

년월	북한군	중국군	계	누계	년월	북한군	중국군	계	누계	
1950	7	39	39		1952	2	83	34	117	
	8	1,706	1,706	1,745		3	104	42	146	
	9	9,074	9,074	10,819		4	1,248	14	1,262	
	10	51,859	51,859	62,678		5	90	0	90	
	11	35,465	35,465	98,143		6	91	53	144	
	12	37,730	1,245	38,975		137,118	7	73	73	146
1951	1	102	115	217	137,335	8	72	21	93	
	2	2,121	190	2,311	139,646	9	118	6	124	
	3	4,083	122	4,205	143,851	10	1	9	10	
	4	15	1,750	1,765	145,616	11	0	97	97	
	5	1,366	5,214	6,580	152,196	12	1	6	7	
	6	956	8,525	9,481	161,677	1953	1	14	1	15
	7	254	407	661	162,338		2	22	5	27
	8	395	95	490	162,828		3	3	7	10
	9	1,848	492	2,340	165,168		4	0	0	0
	10	852	1,510	2,362	167,530		5	0	5	5
	11	495	750	1,245	168,775		6	0	12	12
	12	103	150	253	169,028	7	0	36	36	
1	37	88	125	169,153	합계	150,420	21,074		171,494	

\* 출처: RG 389, Records of the Enemy Prisoner of War Information Bureau, UN Command, Enemy Prisoner of War / Civilian Internee Information Center, Unclassified Records, Box 19, *Prisoner of War Capture Rates*.

기존의 포로관련 연구에서는 중국군이 포로가 된 이유를 대체로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는 귀순 혹은 투항으로, 스스로 포로가 된 경

7) 홍학지 지음·홍인표 옮김, 2008,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국학술정보(재발간), 283쪽. 홍학지는 이들 포로 때문에 이후 정전회담에서 포로문제와 관련한 담판에서 중국 측이 엄청나게 불리했다고 보았다; 중국군 제5차 전역의 전투상황과 중국군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1991, 『중국인민지원군 抗美援朝戰史』, 세경사, 129~167쪽 참조.

우이다. 식량부족과 탈진, 이로 인한 사기 저하가 원인이었고, 투항한 경우 국민당 출신 병사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유엔군의 귀순 권고 전단을 가지고 있었고, 십자형 메달 같은 것을 지니거나 숨겨두었던 국민당 당원증을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유엔군에 협조적이었고, 후에 대만으로 송환되기를 원했다. 대표적인 예로 1951년 5월 19일~30일 까지 벌어진 용문산 전투에서 중국군들은 30~40명씩 떼지어 투항했고 때로는 저항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상의를 모두 벗고 투항하는 경우도 있었다.<sup>8)</sup>

둘째는 불가피하게 포로가 된 경우이다. 전투 중 부상이나 총탄이 떨어졌거나 식량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 혹은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포로가 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포로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포로획득 통계를 보면, 중국군 포로의 70% 이상이 중국군의 5차 전역에서 불가피하게 포로가 된 경우로, 투항이나 귀순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포로획득 과정만을 생각한다면, 압도적 다수가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대만행을 선택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부대의 50~70%가 예전의 국민당군 출신이라고 파악했다. 미국은 1951년 4월 당시 중국군이 인명손실이 컸고, 무기와 장비의 고갈 등으로 대단히 나쁜 상황에 처했지만, 그것이 바로 귀순 혹은 투항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년 이상 진행된 중국공산당의 세뇌효과보다는 육체적 억압, 엄격한 감시”가 그들의 변절을 막고 있다고 파악했다.<sup>9)</sup> 자발적이지는 않아도, 억압과 감시 등을 통해 투항이나 귀순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8) 조성훈,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52~53쪽.

9) ‘주한 미대사가 중국군 포로에 대해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1951년 4월 21일, FRUS 1951, 374~375쪽.

## 2. 중국군 포로조직

중국군 포로수용소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이전 국민당군 출신 장교들이었다. 중국은 공산화 이후 국민당군 장교를 사병으로 강등시켜 교화 및 재교육을 실시했는데,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채 완료되지 않은 ‘과도기’였다. 때문에 포로가 된 국민당군 출신 장교들은 수용소에서 바로 반공조직을 만들기 시작했고, 중국군 포로수용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한때 중국군에 투항했다가 다시 유엔군에 의해 생포되거나 귀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공과 국민당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더 과도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중국군 포로수용소 지도자들은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남중국 하이난섬에서 중국공산군에 포로가 된 예전의 국민당군 소속 현병이고, 다른 부류는 국민당군 군사학교를 졸업한 위관급 장교들로 그들 중 상당수가 공산군에 흡수되면서 사병으로 강등된 상태였다. 이들이 포로수용소를 지배하는 방식은 물품 통제와 폭력이었다.

1951년 7월 2일 제72수용소 5대대 안에서 인여량(印汝亮) 등 179명이 ‘중국애국청년반공구국단’을 결성했고, 86수용소에서도 왕준명(王尊銘), 고종령(賈鐘靈) 등이 주동이 되어 ‘반공항아애국청년동맹회(反共抗俄愛國青年同盟會)’를 조직했다. 72수용소 장교대대에서는 위세희(魏世喜), 왕유민(王有民) 등이 1951년 6월 3일 준비회를 개최한 후 ‘중국국민당 제 63지부’를 조직했다.<sup>10)</sup> 좌익포로들도 후에 이에 대항하는 조직을 결성했지만, 우익 포로조직에 비해 상대적 열세였다.

우익 포로지도자들은 중국군 포로들의 몸에 강제로 반동적 표어를 새겼다. 팔뚝에 “공산당에 반대하고 소련에 저항하자”, “주더를 죽이고 마

10) 장택석 저, 2013,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85~86쪽.

오쩌똥을 제거하자(殺朱拔毛)”를 새기는 것에서부터 가슴과 등에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기’를 새기기도 했다. “대만으로 가기를 요구하는 혈서”에 강제로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었으며, 심지어는 “나를 대만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라는 ‘절명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sup>11)</sup>

미국은 일찍부터 중국군 포로 내의 조직과 그들의 행태, 미군 경비대와의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다. 주한미대사관 2등 서기관 필 맨하드(Phil Manhard)는 1951년 7월부터 12월까지, 1952년 2월의 마지막 주 동안 거제도에서 중국인 전쟁포로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군 포로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sup>12)</sup> 그가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로지도자들이 중국인 포로 전체의 치료, 연료, 의류, 음식 등에 대한 차별적 통제권을 행사하며, 둘째 동경의 유엔 군사령부 휘하에서 포로업무에 배정된 대만측 중국인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셋째 이들의 주도로 대만으로의 송환을 위한 청원 운동이 벌어졌으며, 강제로 포로들의 서명을 받아내려고 잔인한 폭력이 사용되었고, 넷째 이들은 폭력과 강제를 통해 중국인 수용소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는데, 구타와 고문, 처벌 위협 등이 일상화되었다는 사실 등이었다. 이 보고서는, 포로수용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다수의 포로가 자신들의 현재 수용소로부터 나와서 친공수용소로 도망갈 것이며, 이것은 어떤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반공포로조직과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자유도 부인하고 협박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익 포로지도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통제권을 행

---

11) 장택석 저, 2013, 앞의 책, 156쪽.

12) 「주한 미대사 무초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국인 포로에 관해 보낸 비망록」, 1952. 3. 19, FRUS 1952, 98쪽.

사한 것은 결국 유엔군포로수용소 당국이었고, 이 사실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합참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엔군 수용소당국은 수용소 내 반공성향의 포로들 중 몇 명을 동경의 미국동군사령부로 보내 심문 후 극동군정보국에서 특수훈련을 마친 후 다시 수용소로 들여보내 친공포로들과의 전투에 앞장서도록 했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파견되어 미군의 간첩활동을 강요받기도 했다.<sup>13)</sup>

## II. 중국군 포로 심사와 선택

### 1. 중국군 포로 심사

포로의 송환여부를 파악하는 포로심사는 휴전회담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회담장에서는 여전히 포로 송환 원칙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었지만, 유엔군 측은 1952년 4월 포로의 송환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포로 심사를 시작했다. 당시 중국군 포로들은 거제도의 4개 수용소에 분할 수용되어 있었는데, 전원이 심사를 받았다. 이미 포로지도자에 따라 수용소의 성향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유엔군 수용소 당국은 그 중 규모가 큰 2개 수용소에는 반공포로들이, 다른 2개 수용소에는 친공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판단했다.<sup>14)</sup> 포로심사를 담당했던 왈론(Harold Whallen)소령이 상담했던 첫 번째 수용소에서는 수용 포로의 85%인 6,900여 명이 송환을 거부했고, 두 번째 수용소에서는 본국송환 희망 포로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253명의 극렬한 공산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13) 시성문 저, 1991, 『중국이 본 한국전쟁』, 한백사, 259쪽.

14) 린드세이 화이트 저, 1957, 앞의 책, 208~209쪽.

던 세 번째 수용소는 전원이 본국 송환을 희망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소굴로 알려졌던 네 번째 수용소는 총 1,500여 명을 개별 면담한 결과, 그 중 15%는 송환을 거부했다. 이처럼 포로의 선택이 수용소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것은, 이들의 선택이 자발성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그 후 추가로 송환여부를 심사한 결과 1952년 7월 현재 20,801명의 중국군 포로 가운데 송환희망자는 6,550명, 송환거부자는 14,251명이었다. 1952년 7월 현재 전체 포로의 심사 결과 및 중국군 포로 심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포로 심사 결과 송환 희망/거부 포로(1952년 7월 현재)<sup>15)</sup>

항목	송환희망포로(명)	비율(%)	송환거부포로(명)	비율(%)	합계
중국군 포로	6,550	31.5	14,251	68.5	20,801
북한출신 포로	63,347	64.6	34,196	35.6	96,543
남한출신 포로	4,689	28.7	11,622	71.2	16,311
민간인인류자	10,136	28	26,153	72	36,289
총인원	83,722	49.3	86,222	50.7	169,944

심사 결과를 보면, 북한출신 포로는 송환 희망자가 65%인데 비해 중국군 포로는 32%에 불과했다. 중국군 포로의 송환거부 비율은 남한출신 포로나 민간인인류자의 경우와 비슷한 수치였으며, 북한출신 포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산군 측에서 특히 중국이 이러한 심사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산군 측은 유엔군의 포로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영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들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5) 조성훈, 2010, 앞의 책, 246쪽, ‘【표 5】 포로 재심사 결과’ 참조. 원래 표에 비율을 추가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심사 결과가 나왔던 초기에 미군의 대응이나 문제 의식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애초에 중국군 포로 가운데 전 국민당군이 3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에서 절반 정도인 15%가 송환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다.<sup>16)</sup>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중국군 포로의 거의 70%가 송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1차 포로심사 결과가 나온 1952년 4월, 미 국무부와 주한 미대사관 사이에 오고간 전문을 보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4월 22일 주한 미대사관은 국무부에, 중국군 포로 다수가 송환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이 어떤 원인에서 나온 것인지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을 보냈다. 이에 호응하여 미국무부는 체이스(Sabin Chase) 극동조사국장을 약 2주간 한국에 파견하여 포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다.<sup>17)</sup>

조사를 통해 미국무부가 파악한 중국군 포로들의 송환 거부 선택 요인의 핵심은 ‘강압’이었다. 포로수용소의 성향과 포로지도자의 영향은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강압 요인이었다. 우익 포로지도자들은 가혹한 구타와 고문, 살상을 자행했고, 수용소 내에는 강압과 폭력, 속임수가 난무했다. 미국무부가 파악한 포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은, 첫째 포로지도자들이 포로들이 방송을 듣거나 오리엔테이션 공보를 읽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의 포로들이 투표가 포로 송환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포로지도자들의 속임수로, 심사는 이후 중국 본토로 돌아갈 선택권을 주려

16) US Army Military Police Board, “Control and Administration of POWs during the Korean Conflicts”, p. 51.

17)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63권, 390쪽.

는 것이 아니라 유엔당국이 공산주의자들을 가려내 처벌·처형하려는 것이라고 속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심사 이전이나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살인·구타·위협 등 신체적 가혹행위가 있었다. 72수용소에서 5명, 86수용소에서는 2명이 살해되었다는 수용소 기록이 있지만, 사상자는 그보다 더 많았다.<sup>18)</sup>

## 2. 중국군 포로의 선택과 그 배경

그렇다면 중국군 포로가 본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대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언제부터 인식했을까? 포로의 송환여부 심사는 미국이 자원 송환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후 공산군 측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1952년 4월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포로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인 1951년 10월 중국군 포로 14,000명이 대만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일이 있었다.<sup>19)</sup> 14,000명이 라는 수치는 송환심사 후 본국송환을 거부한 포로 숫자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탄원서가 어떤 경로로, 누가 주도하여 작성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한국인 포로들에게 남과 북의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인 포로들에게는 대만이라는 제2의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했다.

미국은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 중국군 포로의 심사와 선택 문제를 심리전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1951년 6월 5일 미 육군 심리전참모 맥클루어(Robert A. McClure)는 본국 송환 거부 포로의 대만 송환을 제안했다. 요컨대 “이전에 국민당에 속해 있었

---

18) 주한 미대사 무초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1952년 5월 12일, FRUS 1952, 192~193쪽; 주한 미대사 무초가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국군 포로 상황”, 1952년 6월 28일, FRUS 1952, 360~361쪽.

19) 미국무부 한국국내상황관련문서: 『한국전쟁자료총서 63권』, 366쪽.

거나, 투항한 데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중국군 포로들은 대만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점은, 대만이 아직도 합법적으로는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해도 미국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제네바협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점, 적이 만일 생포되었을 때 자원에 의해 송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적군이 투항할 것이므로 차후 심리전 작전을 강화시켜야 할 것 등이었다.<sup>20)</sup> 이것은 유엔군 측에서 자원송환원칙을 내세우게 된 주요 배경이기도 했다.

그러나 포로협상을 담당했던 유엔군 측 수석대표 조이(C. Turner Joy) 제독은 이 제안에 반대했다. 1952년 2월 6일 보고서에서 조이제독은, 공산측이 자원송환원칙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사가 이 원칙을 주장하는 근거가 건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포로가 배가 고팠거나, 장비가 불량하였든가 탄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항했지 송환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 때문에 항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sup>21)</sup>

1952년 4월 10일 대중국정책연구소는 중국군 포로가 자유롭게 송환을 선택하도록 해달라는 서한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 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18,000명의 중국인 전쟁포로 중에 12,000명이 장제스를 위해 싸우겠다고 대만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피로 쓴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3,000명이 반공주의 표어를 스스로 문신했고,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항복하도록 한 심리전 진단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 등이 담겨 있었다.<sup>22)</sup>

미군의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CIE) 교육이 포로의 선택에 미친 영향도 컸다.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 중국군

20) 육군본부, 1968, 『유엔군전사: 휴전침막과 싸우는 전선 제2집』, 101쪽.

21) 육군본부, 1968, 위의 책, 109쪽.

22)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한국전쟁 자료총서 63권), 국방군사연구소, 366쪽.

포로들에게 있어 대만에서 파견된 요원들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 대만은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했고, 정보수집, 심리전, 포로관리 등에서 미국과 협력했다. 특히 중국군 포로의 송환 거부를 유도한 대만의 공작은 반공포로조직을 만들어 수용소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유엔군 수용소 당국은 거기에 힘을 실어 주었다.<sup>23)</sup>

### Ⅲ. 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송환 비율

#### 1. 포로협상 쟁점과 중국군 포로

1951년 12월 18일 양측은 포로명단을 교환했다. 유엔군사령부에서 제시한 공산포로의 수는 132,474명(북한인 95,531명, 중국인 20,700명, 남한출신 16,243명)이었는데 비해 공산측이 통보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의 수는 한국군 7,142명, 유엔군 4,417명 등 모두 11,559명에 불과했다. 양측이 모두 이 명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이후 포로협상에서 양측은 이때 제시한 포로명부상의 숫자를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인 포로의 경우 민간인억류자와 남한출신 포로의 분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석방시키는 등 변동이 있었지만,<sup>24)</sup> 중국군 포로의 경우는 협상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 처리되었다.

23) 여계언, 2013, 「6.25 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 대만 선택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88~116쪽.

24) 유엔군의 포로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영, 2014, 「유엔군의 포로정책-‘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427~470쪽 참조.

유엔군은 자원송환원칙을 구상하면서 중국군 포로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했다. 중국군 포로문제는 당시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도 관련이 있었다.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정부를 지원했던 미국은 대륙의 중국정부를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포로협상 초기에 자원송환원칙을 지지하면서, 중국군 포로들이 중국이나 대만으로 갈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25)</sup> 중국은 포로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송환원칙을 두고 대립하던 1952년 3월 27일 포로협상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절충안 역시 이러한 입장을 담고 있다.<sup>26)</sup>

- **중국군 포로와 유엔군 포로들은 반드시 송환하고,**
- 북한군 포로와 한국군 포로들은 원적이나 가정이 자기측 군대가 제공하는 지역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전부 송환하며,
- 쌍방의 한국인 포로들은 그 원적이나 가정이 상대방 지역에 있는 자로서 송환을 원치 않으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

요컨대 외국인인 중국군과 유엔군 포로들은 전원 무조건 송환하고, 북한군과 한국군 포로들은 원적에 따라 결정하되 상대방지역 출신자는 돌려보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었다. 중국군 포로의 전원송환이 대전제였다. 남한출신 포로는 송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유엔군을 비롯한 중국군 포로를 ‘외국군 포로’의 범주로 묶어 한국인 포로들과

25) ‘변영태 외무장관이 덩치웨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 1952. 1. 16’(조성훈, 앞의 책, 203쪽 재인용). 이 서한에서 변장관은 자유중국 정부도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한 중국군 포로는 대만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26) 포로협상 세부사항을 위한 제34차 참모장교회의, 1952. 3.27, 『남북한관계사료집』 7권, 402~413쪽; 인민일보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중국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하였다(「사설: 미국의 전쟁포로 억류를 굳게 반대한다」, 『인민일보』(1952. 5. 9)(정부기록보존소 역, 2002, 『한국전쟁과 중국』 I, 227~230쪽).

구분함으로써 중국군 포로의 전원송환을 관찰하려는 중국측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일정한 양보를 하더라도 포로협상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다. 김일성은 “지원군의 대다수 전쟁포로가 이전 국민당 군이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sup>27)</sup> 중국과 북한이 포로 협상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중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 포로는 숫자보다 그 자체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포로협상은 송환원칙을 두고 난항을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 합참은 “중국군 포로문제가 상대적으로 북한군 포로문제에 비해 더 중요하며, 이 같은 사실을 몇몇 정부는 이미 알고 있고 결국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sup>28)</sup> 점차 2만 명의 중국군 포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정작 전쟁 당사자인 남한의 이승만대통령은 포로협상이 난항을 겪는 핵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중국이 휴전협상에 적극적인데 북한이 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sup>29)</sup> 이는 전쟁을 남북 간의 대결로 보고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를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군 포로문제가 표면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회담장에서도 중국군 포로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거나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언급을 회피하고자 했다.<sup>30)</sup>

미국은 중국정부가 중국군 포로를 그들의 적인 장제스 정부, 대만에

27) 선즈화 저,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410쪽.

28) 미 합참이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에게 정전협상전략에 대해 보낸 서한, 1952년 5월 26일, FRUS 1952, 244~247쪽.

29) 1952년 7월 21일 이승만 기자회견, 『동아일보』 1952년 7월 24일.

30) 미 합참이 극동군사령관 클라크에게 보낸 정전협상 전체회의 개시에 따른 협상지침, 1952년 7월 23일, FRUS 1952, 419~420쪽.

보낼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제적십자사가 포로 면담을 감독하고 실행할 공정한 중립적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포로의 송환 선택을 허용하고 관찰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국제적십자사도 양측이 심사를 결정하기 전에 면담이 허용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산측은 국제적십자사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다.<sup>31)</sup> 미국무부는 유엔군사령부가 포로수용소를 더 확실하게 통제한 이후, 인도정부에 송환거부 포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했다.<sup>32)</sup>

미국은 인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1952년 6월 15일 인도 파니카(V. M. Panikkar) 대사가 저우언라이 중국 수상을 만났는데, 여기서 저우언라이는 두 가지 방안을 포로협상 해법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9만 명의 북한포로와 2만 명의 중국군 포로를 기초로 포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파니카 대사는 포로 숫자 문제에서 중국군 포로 2만 명이 모두 포함된다면 10만 명 수준으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핵심 의도는 송환 포로 총수가 아니라 중국군 포로 2만 명을 모두 포함시키는 데 있었다. 두 번째 방안은 포로 전원 송환이라는 제네바협약을 기본원리로 수용하되, 송환거부포로를 판문점으로 이송시켜 4개 중립국과 국제적십자사 요원의 면접을 받게 하는 방안이었다. 인도와 영국 등은 두 번째 안에 관심을 보였지만, 중국정부는 중국은 첫 번째 방안에만 관심이 있다고 인도대사관에 알렸다. 중국군 포로의 전원 송환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유엔군 측이 송환 포로의 최종 숫자를 공산 측에 통보한 것은 1952년

31) 조성훈, 2010, 앞의 책, 206~207쪽.

32) “전쟁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무부 정책기획실 비망록”, 1952년 6월 11일, 『한국전쟁자료총서』 5권, 34~39쪽.

7월 13일 104차 본회담에서였다. 유엔군 측은 한국인 76,600명과 중국인 6,400명 포함 약 83,000명이 송환될 것이라고 제시했다.<sup>33)</sup> 유엔군 측은 포로의 선택에 따른 최종 숫자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결국 협상의 진전이나 결렬에 대한 선택권을 공산군 측에 넘겨버린 셈이었다. 이로써 공산군 측이 이것을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휴전이 성사될 수도, 전쟁을 계속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마오쩌둥은 유엔군 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것은 중국군 포로와 북한군 포로의 송환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sup>34)</sup> 유엔군이 이러한 결과를 통보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이며,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 측이 발표한 인민군과 지원군 송환 포로의 숫자는 둘의 비율이 서로 맞지 않는다.** 적은 이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전투적 단결을 무너뜨리려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는 적의 이런 도발적이고 유혹적인 방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여긴다. 또한 적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중국은 ‘전투적 단결’을 강조하며 북한과 소련의 동의를 구했다. 중국은 이렇게 자신들의 강경방침을 내부적으로 관철시킨 후,<sup>35)</sup> 5일 만에 열린 7월 18일 제105차 회담에서 유엔군 측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유로

---

33) 제104차 휴전회담 본회담, 1952. 7. 13,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636~639쪽.  
34)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1952. 7. 15(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381쪽, ‘마오쩌둥이 미국 측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18일, 沈志華 編, 2003,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48): 대만, 1187~1189쪽.  
35) 당시 공산 측 내부에서 오고간 전문과 북한 및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출판부, 254~259쪽 참조.

제시한 것은, 2만 명의 중국군 포로가 전부 포함되지 않았고, 중국군 송환 희망 포로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다. 1951년 12월 28일 최초 수교한 포로명부에 비추어 북한군은 80%가 송환을 선택한 반면 중국군은 송환 희망자가 32%에 불과한데, 이러한 비율은 유엔군 측이 의도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6)</sup> 모스크바에서 이때 열린 중·소 회담에서 중국은 다시 한 번 전쟁을 계속한다는 강경책을 재확인했고, 북한과 소련도 이에 동의했다.<sup>37)</sup> 결국 중국군 포로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포로협상이 결렬되었고, 그로 인해 전쟁은 1년 이상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 시점에서 중국군 포로 문제에서 강경 입장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중국군 포로의 송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포로문제가 단지 강경책의 구실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반드시 관철해야 할 만큼 중요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시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지만, 포로 협상은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 방침과 그 가능성을 고려했다. 포로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더 많은 포로를 획득하여 송환포로 숫자를 맞추거나, 포로 숫자를 속이거나, 협상의 외곽에서 해결책을 찾거나 하는 등이 고려되었다. 미 국무부 일각에서는 송환을 거부하는 중국군 포로들을 맡아줄 것을 인도정부에 요청하는 방안, 멕시코를 통해 원하는 전쟁 포로들을 동시 교환하고 나머지 포로들은 정치적 망명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유엔회원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36) 제105차 휴전회담 회의록, 1952. 7. 18. 『남북한관계사료집』 2권, 640~648쪽.

37) 모스크바 중·소 회담에서 논의된 포로관련 내용은 김보영, 2016, 앞의 책, 261~262쪽 참조.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던 미 국방부의 입장은, 정해진 기한 이후 포로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어떠한 제안도 검토하려 하지 않았다.<sup>38)</sup>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북한지역 군사기지에 대한 대규모 폭격작전에 착수하였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

판문점회담이 무기한 중단된 이 시기에 한국전쟁 휴전문제는 유엔총회로 무대를 옮겨 논의되었고, 인도는 충실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1952년 12월 1일 유엔총회에서 인도정부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포로 석방과 송환은 제네바협약을 준수하여 처리하되, 포로 송환을 방해 혹은 영향을 줄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 위에서, 인도적 대우와 참전하지 않은 4개국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안이었다. 이 제안은 12월 3일 유엔총회에서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sup>39)</sup>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참석 없이 채택되었고 미국 안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했다. 결국 유엔총회에서도 포로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그러한 논의 과정이 무의미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교전 양측은 1953년 재개된 휴전회담에서 인도안과 유사한 방안으로 포로협상을 마무리했고,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중국의 양보였다.<sup>40)</sup>

---

38) Rosemary Foot, *The Wrong War-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175~176.

39) Resolution 610(V I I) Adopted by th General Assembly on 3 December 1952(외무부, 1976, 『유엔한국문제결의집(1947~1976)』, 163~167쪽.

40) 로즈마리 풋(1985, 위의 책, pp.227~229)은 1953년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 등 전쟁을 끝내려는 더 거친 정책을 준비했기 때문에 공산측이 굴복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과 북한이 취한 정치행위 중 가장 도전적인 것은 미국의 자원송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양쿠이송(楊奎松, 2001, 「중국의 정전협상 전략」, 『한국전쟁 중 중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문)은 중국이 경제적 이유로 포로협상에서 양보하였다고 보았다.

## 2. 중립국송환위원회와 포로의 마지막 선택

미국은 1953년 5월 8일 재개된 포로협상에서 북한군 포로는 전원 석방하여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고 중국인 송환거부 포로들만 중립국에 이관하자고 제안했다. 유엔군 대표 해리슨(Willim K. Harrison, Jr)은 공산측이 타협을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산군측 대표 남일은 이 제안을 반대했고, 회담은 14분 만에 끝났다.<sup>41)</sup> 결국 미국은 한국인 송환거부포로들도 중국군 송환거부 포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sup>42)</sup> 이에 공산군측이 동의함으로써 1953년 6월 8일 양측은 포로협정에 조인했다.

다음날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대대적인 휴전회담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북진통일 결의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서울 시위행렬에 참가한 시민 수는 무려 6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sup>43)</sup> 시위대 숫자는 상당히 과장되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회담 진행으로 소외된 한국인의 정서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승만은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석방’을 감행했다. 엄밀히 말해 ‘석방’이 아니라 ‘탈출’ 지원과 방조였고,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컸지만 다분히 대국민 선전용이었다.<sup>44)</sup>

미국은 이승만의 돌출행동이 정전을 방해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는 포로협상의 쟁점이 중국군 포로들이라는 점이었다.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이 감행된 당일, 미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작성한

41) “공산 측, 유엔군 측의 포로교환 제의 거부”, 『경향신문』, 1953년 5월 8일.

42)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조건에 대해 지시, 1953년 5월 22일, FRUS 1953, 1079~1082쪽.

43) “서울과 부산에서 휴전회담 반대 시위 진행”, 『조선일보』, 1953년 6월 11일.

44)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보영, 2009,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과 한미교섭』 『이화사학연구』 제38집 참조.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sup>45)</sup>

전쟁포로에 대한 이승만의 움직임은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전을 방해할 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략)… 공산주의자들은 오래 전에 진정한 쟁점은 중국군 포로들이며, 한국군 포로들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밑줄: 필자 강조) 체면 때문에 그들은 정전 이후 전쟁포로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우리의 최근 제안을 수락할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한 잡음을 조성한 후 그들은 우리가 제안한 정전안에 여전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중략)… 공개성명을 통해 적절하게 분노를 표출한다(이승만 대통령의 돌출행동에 대해: 필자주)…

합의에 따라 정전 직후 송환거부포로의 최종처리는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중립국송환위원회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된 공산군 포로는 총 22,604명이었고 그 중 중국군 포로는 11,704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해설 기간 동안 북한군 포로는 1,169명, 중국군 포로는 2,021명이 해설을 받았다. 설득회 과정은 순조롭지 못했다. 설득장소로 쓰일 임시막사 시설을 건설하며 시일을 보내거나 포로들이 설득회를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sup>46)</sup> 중립국송환위원회 설득회를 거친 후 포로처리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45) 1953년 6월 18일, 미국무부 정책기획실,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대응”에 관한 입장: 미국무부 정책수립처 한국관계문서(Records of Policy Planning Staff),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14권, 419~420쪽.

46) 양측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설득회 준비과정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유엔 측에 그러한 책임을 묻기도 했고(“포로설득 12일 개시? 국련군 측 막사 속성타협안을 제출”, 『경향신문』 1953년 10월 11일), 유엔군 측에서는 공산측이 반공포로들을 변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자 설득회를 고의로 정돈(停頓)상태에 빠뜨리고 중단시켰다고 비난했다(“중공군대위 귀순, 공산 측 포로설득 흥계 폭로”, 『경향신문』 1954년 4월 13일).

【표 3】 중립국송환위원회 포로 처리 현황: 1953년 12월 24일

현황	수용소	남측 수용소			북측 수용소			
		한국인	중국인	합계	미국인	영국인	한국인	합계
1.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	7,900	14,704	22,604	23	1	335	359	
2. 해설	1,169	2,021	3,190			255	255	
3. (1) 해설 받은 후 송환	47	90	137			7	7	
(2) 해설 받지 않고 송환	87	145	232	1			1	
(3) 송환된 자 총계	134	235	369	1		7	8	
4. 사망	20	13	33					
5. 탈출	9		9			1	1	
6. 행방불명	3	2	5					
7. 현재 총 관리인원	7,734	14,454	22,188	22	1	327	350	

\* 출처: 「Interim Report of the Neutral Nations Repatriates Committee」, Statement of Prisoners of War as at 24 December 1953, p.108(이선우, 2012,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논문, 21쪽 재인용)

이 과정에서 송환거부포로 가운데 북한군 포로 7,900명 중 188명, 중국군 포로 14,704명 중 440명만이 애초 선택을 번복해서 본국 귀환을 결정했다.<sup>47)</sup> 결과적으로 중립국송환위원회로 인계된 북한군 포로의 1.69%, 중국군 포로의 1.59%만이 다시 송환을 선택하였다. 설득회를 거쳐 중국군 포로가 선택을 번복한 경우는 상당히 적었다. 설득회 과정에서도 수용소를 장악한 반공포로조직의 영향력 하에서 포로들의 선택은 자유롭지 못했고 집단적으로 해설을 거부하도록 강요당했다.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의심되는 포로들은 폭행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기도 했다.<sup>48)</sup>

47) RG 389, Records of the Enemy Prisoner of War Information Bureau, UN Command, Enemy Prisoner of War/Civilian Internee Information Center, *The Handling of POW during the Korean War(1960)*, p.97.

48) 이선우, 2012, 앞의 논문, 22쪽; 심지어 중국군 송환거부포로들이 동료포로의 공산측으로의 송환 요청을 막기 위해 인도군 통역관인 인도군 소령을 납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인도군 장교 납치, 격분한 중공군출신 반공포로들이”, 『경향신문』 1953년 9월 28일).

중립국송환위원회를 통한 포로처리 과정은 미국이 자원송환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군 포로 전원 송환을 주장하던 중국 측 입장을 살려주는 ‘체면치레’이기도 했다. 때문에 중립국송환위원회를 통한 포로처리 결과가 포로의 송환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간 ‘반공포로’들은 대대적 환영을 받았지만, 대만 사회의 하층에 속해 비천한 생활을 했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고통 받았다. 마찬가지로 송환을 선택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중국군 포로들 역시,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이후 귀관소에서 심사를 받았고, ‘변절행위’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자아비판을 해야만 했다. 공산당원들은 당적을 상실했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도 ‘변절자’ 혹은 ‘반혁명분자’로 혼인, 직장,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sup>49)</sup>

## 맺음말

포로협상에서 포로의 선택과 송환비율은 최대쟁점이자 협상 결렬의 주요인이었고, 특히 중국군 포로의 전원송환이 관건이었다. 중국군 포로는 17만여 명의 공산군 포로 가운데 2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중국 측은 포로 전체가 아니라 2만 여명의 중국군 포로의 선택에 더 의미를 부여했다. 공산 측 내부에서 오간 전문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포로협상의 최대 쟁점은 송환원칙 자체가 아니라 중국군 포로의 전원 송환이었고, 중국군 포로의 송환거부 비율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협상장 배후에서 중국은 포로협상에 강

49) 장택석 저, 2013, 앞의 책, 396쪽.

경하게 대응하도록 북한을 설득했으며, 북한군 포로는 양보하더라도 중국군 포로는 전원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은 포로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군 포로의 선택이었고, 한국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공산 측에서 중국이 가졌던 주도권과 결정력을 보여준다.

유엔군의 자원송환원칙이 관철되어 포로들에게는 송환여부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휴전 성립 후 또다시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주관하는 양측의 설득회를 거쳐야만 했다. 유엔군의 일방적인 민간인억류자 석방과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 등을 거치면서 유엔군 포로수용소에는 송환을 거부한 한국군 포로보다 중국군 포로 숫자가 더 많았다. 휴전 성립 후 중립국송환위원회로 넘겨진 포로 가운데 중국군 포로의 비중은 2/3가 넘었다. 중국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설득회 비중이 더 컸던 셈이다. 그러나 설득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선택을 번복한 경우도 적었다. 중립국송환위원회를 통한 포로처리 과정은 미국이 자원송환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통과된 안이었고, 중국군 포로의 전원 송환을 주장하던 중국 측 입장을 살려주는 ‘체면치레’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로의 송환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중국군 포로의 심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중국군 포로수용소의 반공적(친국민당군) 성향의 포로조직과 포로지도자의 강압적 지배구조, 포로의 성분 등으로 이는 포로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포로들의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인이었다. 둘째는 유엔군이 실시한 포로교육과 이것을 담당한 교육요원의 영향으로, 대만은 교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로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중국군 포로의 송환비율이 쟁점이 된 이유는 한국전쟁의 이념전적, 심리전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휴전으로 끝난 무승부의 전쟁에서 포로의 선택은, 협상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던 양측 의도와 긴밀히

결합되었다. ‘강요된 선택’의 과정에서 포로들은 이념전의 희생양이 되었다. 중국군 포로의 경우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 포로들과 처지가 달랐지만, 남과 북의 포로들이 직면했던 선택과 마찬가지로 본국 송환을 거부할 경우 대만행을 강요당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포로들에게 ‘강요된 선택’은 한국전쟁의 이념적 성격이 드러나는 한 단면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50~1953

Record Group 59, 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Relating to State Dept.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935~1962, Box 21, Lot file 61D167

Record Group 389, Records of Enemy Prisoner of War Information Bureau, UN Command, Box 2460 / 2397

Record Group 389, Records of the Enemy Prisoner of War Information Bureau, UN Command, Box 16, *The Handling of POW during the Korean War(1960)*, June

Record Group 338, Records of US Army in Korea, POW/Civilian Internee Information Center History File/GQ FEC, SCAP, UNC, Psychological Section

United Nations Command,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국사편찬위원회, 1994 『남북한관계사료집』 1~10권)

沈志華 編, 2003,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상·중·하), 대만: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48)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한국전쟁과 중국』 I · II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 2. 논저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3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ermes W.G., 1966,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S Army, Washington,

- D.C.(육군본부 역, 1968, 『유엔군전사: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 James F. Schnabel, Rovert J. Wats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III The Korean War Part II, 197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1991,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 하)
- Rosemary Foot, 1985,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Cornell Univ. Press
- Rosemary Foot, 1990,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s, Cornell Univ. Press
- William Steuck, 1995,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Univ. Press(김형인 외 공역, 2000, 『한국전쟁의 국제사』, 푸른역사)
- William Lindsay White 1957, The Captives of Korea(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역, 1986, 『한국전쟁 포로』)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 1996, 『한국전쟁의 포로』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9, 『한국전쟁 휴전사』
- 김경수, 2006, 『인도와 한국전쟁-인도 비동맹외교의 기원』, 한국학술정보(주)
- 김보영, 2016,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 선즈화 저·최만원 역,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 柴成文·趙勇田 著·윤영무 옮김, 1991,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板門店談判』, 한백사
- 조성훈,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 K.S. 티마야 씀·라운도 옮김, 1993, 『판문점 일기 -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의 한국현대사 증언』, 소나무
- 장택석 저·손준식 역, 2009,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주영복 지음, 1990, 『내가 겪은 조선전쟁』, 고려원
- 洪學智, 1991, 『抗美援朝戰爭回憶』, 해방군문예출판사(홍인표 옮김, 1992

-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 김보영, 2014, 「유엔군의 포로정책 - ‘석방’과 ‘송환’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정책과 전쟁의 유산』, 선인
- 김학재, 2009, 「진압과 석방의 정치 -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 김학재, 2010,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전쟁 속의 또다른 전쟁』, 선인
- 김행복, 1997, 「한국전쟁시 포로장악을 위한 공산군 및 친공포로의 조직과 연결체제」 『軍史』 34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민경길, 1997, 「한국전쟁과 포로송환 문제 - 관련 국제법규의 검토」 『軍史』 35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신복룡, 1987, 「한국전쟁 휴전 협정의 비밀 협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 沈志華, 2000,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양진삼, 2002,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 양쿠이송(楊奎松), 2001,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유숙현, 2008,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의 체험과 송환선택」, 연세대학교원 석사논문
- 이병주, 2003, 「共産軍側과 韓國戰爭 停戰會談-스탈린, 모택동의 協商指導와 目標의 차이점」 『戰史』 제5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이서향, 2004, 「유엔과 한국전쟁의 휴전과정」,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 이선우, 2011, 「한국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대학교원 석사논문.

사학연구 제123호(2016. 9)

- 이완범, 200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연구성과, 자료와 논점」, 한  
중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 중 중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연구회
- 정용욱, 2004, 「6·25전쟁기 미군의 빠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  
사와 현실』 제51호, 한국역사연구회
- 정현수, 2003, 「중국자료로 본 한국전쟁-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보』 제6권
- 조성훈, 1998, 『한국전쟁중 유엔군의 포로정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 조성훈, 2001, 「미귀환 국군포로 연구」 한중국제학술세미나 『한국전쟁 중 중  
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군사편찬연구소·한국전쟁연구회
- 조성훈, 2000,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문제  
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79호)
- 김화, 2000, 「한국전쟁의 중국군 포로에 관한 연구」외대국제지역대학원 석  
사논문
- 여계연, 2013, 「6.25전쟁 시기 중국군 포로 연구 - 대만 선택 배경을 중심으  
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 Abstract

# Negotiation of POW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Chinese Communists POWs' Choice

Kim Boyoung

During POW(Prisoners of war) negotiations of the Korean War, the biggest issue was concerning the Chinese military prisoners. China made an issue of the fact that the rate of refusal of repatriation is excessively higher among the Chinese POW than the North Korea's. It's not well known that China took a strong stand with regard to the issue of POW, which led to a rupture of POW(Prisoners Of War) negotiation and even more than one year extension of the war. The US approached the problem of screening and selection the Chinese military prisoners as a part of psychological warfare. The repatriation choice of Chinese POW was influenced by an education by the United Nations forces, and Taiwanese agent in charge of the prisoner education actively induced them to go to Taiwan. However, the decisive factor affected prisoners' choice was right-wing leaders of the former Kuomintang army who took over the prison camp, and the leaders often compelled POW's choice with violence. There was violent coercion behind the reason why the vast majority of Chinese POW refused to be repatriated. The intention of China was also a kind of psychological warfare in nature. In the drawn battle, the choice of POW was closely combined with the intention of both parties to obtain compensation, and the POW fell into the sacrifice of ideological battle with the violent pressure.

Moreover, the fact that the negotiation was delayed for over a year on account of the Chinese POW shows China was the subject of the Communist side with regard to the negotiation and the war. It's connected to an armistice system for the postwar period, and also We can understand the authority of China and the US which took lead the war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s.

Keywords: Chinese POW, repatriation, POW negotiation, psychological warfare, Taiwan, ideological battle